

대선(大選)과 과학기술정책

“과학기술 정책에 적극 의견을 제시를”

이제 제16대 대통령 선거도 4개월 남짓밖에 안 남았고, 앞으로 한국 사회는 급격히 대선(大選) 정국으로 치달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할만큼 권력의 집중현상이 심한 한국에서, 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느냐 하는 것은 사회의 각 분야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는 매우 중요한 국가적 행사임이 틀림없다.

특히 과학기술 분야는 아직도 정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여,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이 요구되는 분야의 하나이다. 그 동안의 경험을 보더라도, 대통령의 의지와 정책이 한국 과학기술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일관된 정책을 펴온 대통령 밑에서는 과학기술자들의 사기가 충천하고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낸 데 비하여, 정책이 표류하고 연구원들을 개혁의 대상으로 치부했던 정권 하에서는 계량적인 투자의 다과(多寡)에 관계없이 과학기술계가 침체되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과학기술 중요성 부각안돼

그러나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과학기술이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된 일은 별로 없었다. 무한경쟁으로 표현되는 세계화시대에는 과학기술이 국가 발전

의 근간이고, 이미 국민의 일상생활과 정치·사회·문화·환경 문제에 이르기까지 과학기술의 직·간접적 영향이 크게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투자와 지원을 늘려 과학기술의 진흥에 힘쓰겠다”라는 정도의 1줄 짜리 판에 박힌 모범 답안이 과거 대부분 대통령 후보들의 과학기술 관련 공약의 전부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16대 대통령 선거도 이미 선출된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 2대 정당의 대통령 후보들의 후보지명 수락 연설에서 과학기술에 관련된 사항은 이 정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면 크게 전망이 달라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우리의 현실은 지난 번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앨 고어 후보가 완숙한 정보화사회의 구현을 주요 공약으로 들고 나오고, 영국의 토니 블레어총리가 과학기술과 교육을 강조하면서 집권에 성공하였던 사실과 비교하면 많은 차이가 있다.

이같이 우리나라 선거에서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부각되지 못하는 주요 원인으로서는 물론 후보와 핵심 참모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무관심과 식견 부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과학기술계의 인사들이 일반적으로 정치에 대하여 소극적 자세를 취하고 있는 현실도 이에 기여하였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물론 과학기술 분야의 속성상

실험실에서 열심히 연구하는 자세가 가장 존중되고 지켜야할 덕목임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중요한 국가의 전환점에서 과학기술 정책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전문가로서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매년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안에 대하여 과학기술자 단체가 의견을 제시하고, 심지어 과학기술자들이 개별적으로 국회의원이나 정부에 청원서를 내는 일이 거의 정례화 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과학기술자들이 정부관료나 정치인들의 무지나 무관심을 타하는 소극적인 자세를 벗어나, 적극적으로 과학기술 정책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해야 할 단계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과학기술관련 예산 5% 육박

21세기로 갓 진입한 현 시점에서 이처럼 우리나라 과학기술자들의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첫째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관련 연구개발 투자가 이제는 국가 총 예산의 5%에 육박하고 있어, 막대한 국민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매우 중요해 졌고,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특히 현장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의 식견이 매우 필요하기 때

**어느 연구개발 사업이 국가적으로 가장 필요하고
그 사업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연구자가 누구인지는
정치인이나 정부관료보다
과학기술자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



吳世正
(서울대 교수, 물리학)

문이다.

사실 어느 연구개발 사업이 현 시점에서 국가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이고 그 사업을 제일 잘 수행할 수 있는 연구자가 누구인지는 정치인이나 정부관료보다 과학기술자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 그러기에 국가 연구개발 과제의 선정과 연구 책임자의 선발에 대한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그 제도를 공정하게 운영하는 데에는 과학기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물론 이 과정에서 학연이나 지연에 얽매이지 않는 객관적인 평가 자세가 필요한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둘째로는 연구개발 투자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 과학기술계는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그 동안 정부출연연구소에 대한 정부의 자의적인 간섭과 무원칙한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출연연구소 연구원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져 있으며, 민간기업에 취업해 있던 과학기술자들도 IMF 외환위기 이후 직업적 안정성이 떨어지면서 불안해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결국 우수한 학생들의 이공계 대학 진학 기피현상을 불러일으켜 한국 과학기술의 장래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학생들이 이공계를 기피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과학기술자들이 사회에 기여하는 정도에 비해 개인적

으로 받는 경제적·사회적 보상이 크게 미흡하기 때문이므로, 미래 후학(後學)을 위해서라도 과학기술자들은 사회적으로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는 의무

셋째로는 한국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기조(基調)를 획기적으로 바꾸어야 할 시점이 되었기 때문이다. 과거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은 선진국의 앞선 기술을 모방하거나 효율적인 생산기술을 개발하는 일이 주요 과제이었고, 국가의 연구개발 시스템도 이러한 목적에 맞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반도체와 조선, 가전(家電), 철강 등 일부 산업 분야에서는 생산기술면에서 이미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했고, 이제는 독자적인 원천기술, 기초기술을 확보하는 일이 산업경쟁력을 유지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시대가 되었다.

따라서 국가 과학기술 정책의 기조도 빨리 눈에 보이는 목표를 가장 빨리 달성하기 위한 자원집중형(資源集中型)으로부터 다양한 원천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장기분산형(長期分散型)으로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변환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기 위한 정책 도구의 개발과 시행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다양화된 민주사회에서 여러 집단의 이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국가의 미래를 짚어준 집단으로서 정치가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알리고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집단이기주의가 아니라 오히려 의무라고 볼 수도 있다.

현재 한국의 정치·행정체제 안에서는 현실적으로 대통령의 정책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선거에서의 공약은 이러한 대통령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번 국민의 정부에서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를 총 예산의 5%로 증가시키겠다는 공약과, 연구개발 사업들의 종합조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공약은 지난 5년간의 과학기술 정책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 것이 사실이다. 마찬가지로 제16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에서도 후보들이 올바른 방향의 과학기술 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고, 당선된 후 그 약속을 지키도록 과학기술자들이 함께 지켜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제 과학기술자들이 과거의 소극적인 자세를 벗어나 적극적으로 국가의 발전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